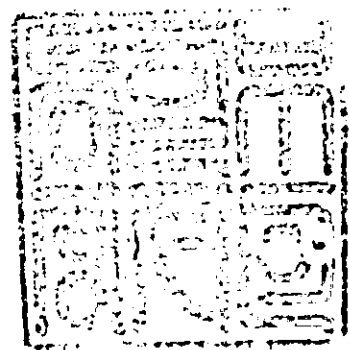


목 차

1. 우리는 어떠한 통일을 지향하는가
2. 통일과정에서의 당면 과제
3. 통일과정에서 聯合制와 聯邦制 논의
4.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기본취지
5.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은 옳은 것인가
6. 대북 접근 자세
7.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노력



1. 우리는 어떠한 통일을 지향하는가

○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확고부동한 국민적 합의가 있음.

- '80年代末 수많은 공론화 과정과 국회공청회 등을 통해 '89년 9월 「民族共同體 統一方案」을 확정했으며, 그후 이를 일관되게 견지해 왔음.

* 당시 김영춘 국무총리, 이홍구 통일원장관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김대중 3단계 통일방안」은 사실상 같다는 점을 확인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음. 국민의 정부 들어와 정부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함을 확인했음. ('99.10.26, 국회본회의 통일부장관 답변)

○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국가의 목표는 ①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民主主義國家 ②市場經濟體制로 번영·발전하는 국가 ③정의로운 福祉國家의 건설임.

- 이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이 확인된 세계사적 조류와 일치하는 것이며

- 김대중 대통령의 3대 국정 철학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와 같은 맥락으로서, 이러한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것이 통일국가의 기초를 닦는 일도 됨.

○ 통일국가의 형태는 「1國家 1體制 1政府」인 민주공화체제를 지향하나, 현실적으로 당장 이러한 통일국가를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과도적 중간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함.

- 통일은 목표인 동시에 과정(process)임.

- 우선 남과 북이 서로 인정·존중, 평화공존하면서 교류 협력을 통해 제반 분야에 걸쳐 민족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 先 민족사회 통합, 後 국가통일 실현, 先 「사실상의 통일 (de facto unification) 상황 실현」, 後 「법적 통일(de jure unification) 실현」의 접근방법을 추진
 - 이러한 과도적 중간과정을 제도화하고 통일과정을 관리하는 협력체로서 「南北聯合」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남북연합」은 남북의 현존 2체제 2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쌍방 정부간 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기능 수행
-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전쟁방지, 긴장완화, 군비통제)
 - 통일지향적 협력관계 발전(불신해소, 신뢰구축, 경제·사회·문화 등 제분야의 민족공동체 형성)
 - 마지막 단계에서 통합과정의 효율적 관리(통일국가제도 마련 등)
- 통일의 원칙은 1950년대부터 유지해 온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임.
- 통일국가의 목표와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에 역행하고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음.
- 공산주의의 이념과 체제는 이미 존립가치를 상실했으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질을 벗어난 「제3의 길」은 있을 수 없음.

2. 통일과정에서의 당면 과제

- 통일을 위해서는 한반도 분단의 근본원인이었으며, 분단을 유지·심화시켰던 한반도 冷戰構造를 解體하는 것이 중심과제가 되어야 함.
-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핵심과제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① 남북간 불신과 대결을 화해·협력관계로 전환

- 남북관계개선은 한반도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문제임.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하고, 경제협력을 하며,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사회문화적 교류를 적극 추진해야 함.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경제 공동체 건설, 상호의존도 제고, 민족동질성 회복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함.

②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와 변화

- 북한이 폐쇄사회를 유지하는 한 남북간 화해협력은 불가능하며, 한반도의 불안요소가 됨.
- 북한이 서방국가들과 관계개선, 국제기구 참여, 국제시장과의 협력을 하도록 도와주어 개방과 대외의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고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임.
- 이러한 개방과 경제체제 변화과정이 진전될 경우 궁극적으로는 정치체제의 변화도 가능하게 될 것임.

③ 미북관계와 일북관계의 정상화

- 한반도문제는 민족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2중적 성격을 갖고 있음. 남·북이 주변 4강, 특히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없이는 남북관계개선이 용이하지 않음.
- 북한과 미국(일본)과의 적대관계 청산,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경제적 제재를 해제하는 대신 북한도 안보위협을 해소하는 과제가 남아있음.
- 미·북간 이미 적대관계 해소·관계개선 원칙에 합의한 바 있고(2000.10.12) 현재 상호 관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상호 이익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함.

④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비통제

- 냉전대결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왔고, 불신을 증폭시키는 요소는 군사적 대결상태임.
- 현재 남북한의 군사력이 지나치게 비대함으로 인해 그 자체가 상대방의 불신과 불안을 자극하고 있음.
- 따라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오해와 오판을 방지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축소지향적 군사력 균형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함.
- *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분야 합의사항: ①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②군사공동위 운영 ③대규모 부대이동·군사연습 통보 및 통제 ④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⑤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⑥대량 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 및 단계적 군축 실현 ⑦검증

⑤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

- 남북간 실질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정치적·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을 실현하고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확보(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선언 이행)
- 이러한 실질적 평화보장조치가 마련되면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됨.

- 이제 우리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냉전종식 과정의 시작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
 - 이 과정이 진척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많은 시련과 난관도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진전되고 있음은 분명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관된 노력이 필요함.
- 현단계에서 준비통제조치도 없이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거나, 통일형태와 통일헌법 등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정책적 차원에서 무의미함.
 - 여건과 환경이 성숙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논의가 나올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3. 통일과정에서 聯合制와 聯邦制 논의

- 그동안 남북간에는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견해 차이와 논쟁을 해왔음.
 - 우리측은 1국가 1체제 1정부의 단일국가를 지향하되, 중간단계로서 남북이 현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평화공존과 민족사회의 통합을 추진하는 「남북연합」이라는 통일준비 과정을 갖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 북한은 '80년부터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여, 남북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되, 즉각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합하는 1연방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자는 주장이었음.
- 그러나 작년 정상회담에서 남북 양 정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이 제시한 「낮은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했음.

- 김정일위원장은 남북이 처해 있는 현상황에서,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합하는 연방국가로의 통일은 실현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 남북이 현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평화공존하고 화해 협력하며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우리측 연합제안이 현실적이라는데 동의한 것임.
- 다만, 북한으로서는 고려연방제를 금과옥조처럼 선전하고 고수해 왔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2체제 연방제의 비현실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관리상 「낮은단계의 연방제」로 표현한 것으로 보임.

o 聯合(confederation)과 聯邦(federation)의 근본적 차이점은 「통일정부」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 연방제는 군사권과 외교권을 갖는 통일중앙정부가 있어야 하나, 「낮은단계 연방제」에 대한 북한의 해석(2000.10.6)에서는 “남북의 현 정부가 내정·군사·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민족통일기구」를 내오자”고 함으로써 통일중앙정부 구성을 삭제하는 대신 「남북연합」과 유사한 개념을 제시하였음.

* 금년 8.15에 범민련의 강령 규약 개정시 연방제, 주한미군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등 고려연방제 실현을 위한 핵심적 요소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북한의 정책변화를 뒷받침

o 정부는 당분간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북한과의 추가적 협의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제2차 정상회담에서 통일방안에 합의할 것이라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함.

4.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기본취지

○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상황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음.

- 북한은 경제난 때문에 變化할 수 밖에 없으나 조기 붕괴가능성은 낮으며
- 그러나 대남 군사노선과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安保威脅은 상존한다는 것임.

○ 따라서 우리로서는 安保를 튼튼히 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 하면서,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和解協力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임.

* 대북정책 3원칙 : ①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②흡수통일 불추구, ③화해협력 적극 추진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經濟를 앞세워 나가는 것이 북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임.

- 국민의 정부는 과거의 정치·군사문제와 경제문제의 연계 정책을 철폐하고 政經分離原則을 채택하여 경제교류협력을 장려했음.
- 그 결과 경제교류협력이 늘어나고, 금강산 관광사업이 성사 되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이 계속되었음.
- 이러한 적극적 화해협력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태도를 변화시켜 南北頂上會談에 호응해 오도록 하였음.
-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는 대전환 되었으며, 주변정세도 미북공동성명 발표 등 한반도 냉전종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음.

- 앞으로도 경제협력이 앞서 나가면서 정치·군사·사회문화 협력문제를 해결하고 통일기반을 닦게 될 것임.
- 유럽국가들이 경제공동체(EEC)를 발전시켜 정치적 통합(EU)에 이르는 과정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임.

0 안보적 측면에서도 역대 정부는 抑制戰略을 위주로 해왔음.

- 우리는 자주국방력 강화와 한미연합 억제력을 유지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고 있음.
- 북한의 군사력은 존재하고 있으나 외부지원세력 부재, 경제난으로 인한 군사력 증강정체 등 전쟁지속능력은 많이 약화되었음.
- 북한이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과멸을 초래할 전쟁을 도발하기 어려울 것이나, 체제붕괴에 직면하거나 궁지에 몰릴 경우 이판사판식 자살적 공격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0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도발을 억제하여 평화를 지키는 정책 (peace keeping)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화해 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peace making)을 병행하고 있음.

- 즉 튼튼한 안보태세를 유지하여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 화해협력을 통해 적대관계를 해소하여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과 북한주민의 대남적대감을 포기·약화시키며
-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안보위험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 화해협력을 통한 북한변화가 진전될 경우 자살적 도발가능성도 약화될 수 있을 것임.

- 화해협력의 안보전략은 전통적인 抑制戰略에 추가하여 적극적·공세적 접근을 병행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데 머물러 있지 않고 평화적 통일의 기반까지 조성하기 위한 不戰勝戰略이라 할 수 있음.

0 이러한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대단히 옳은 선택이라는 것은

- 미·일·중·러 등 주변국은 물론 모든 국제사회가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고 있으며,
- 국민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70%~80%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 야당도 기본적으로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한다고 거듭 밝혀 온 데에서도 알 수 있음.

〈여론조사 추이〉

시기	'98.6	'99.10	2000.3	2000.6	2001.2	2001.6
지지율	80.4%	65.3%	74.0%	93.7%	83.5%	76.7%

* 최근 8.15 남북행사 물의로 여론이 나쁜 시점인 8.24,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도 9대 국정과제중 최고 지지율(63.5%)을 나타내고 있음.

5.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은 옳은 것인가

○ 김대중 정부 이전부터 역대정부는 대북정책 목표로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과제를 추진해 왔음.

- 즉 ①전쟁을 방지하고, ②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이룩하며, ③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④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며, ⑤점진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 등이라고 보며, 이에 대해서는 확고한 국민적 합의가 있음
- 30여년간 추구해왔던 대북정책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현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는 어느 시기와 비교해 봐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함.

○ 안보 태세면에서

- 심각한 경제난으로 북한의 군사력은 정체되고 있으나, 자주국방력의 지속적 증강과, 한미연합 억제력 유지를 통해 우리의 국방태세는 과거 그 어느때보다 최강의 상태임.
- 우리 군은 6.25 이후 최초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무력으로 응징(연평해전)함으로써 북한이 더 이상 무력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도발의지를 꺾었음.
- 현 정부 들어와 안보태세에 구멍이 뚫린 일도 없고,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적도 없음.
- 또한 국민들은 안보열세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갖게 되었음.

○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면에서

- 과거에 비해 남북간 긴장은 현저히 완화되고, 평화정착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음.
- 휴전선에서 도발과 비방·중상이 중지되었고,

- 경의선 철도연결 등을 계기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실질적으로 시작될 수 있게 되었음.

0 남북관계 개선면에서

-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 남북당국간 대화를 통해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닌, 실질 문제를 협의하여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합의, 경협 제도적 장치, 이산가족문제 해결 돌파구 마련은 물론, 인적 물적 교류가 대폭 증대하였음. 연평균 6천명이 방북하고 200개의 기업이 북한에 진출, 위탁가공교역을 하고 있음.

	'89~'97(9년간)	'98~2001.7(3년반)
교역액	총액 15억 4,569만 \$ 연평균 1억 7,174만 \$	총액 12억 283만 \$ 연평균 3억 4,041만 \$
인적왕래	2,980명 (방북 2,405, 방남 575)	22,674명 (방북 21,761, 방남 913)
이산가족	상봉 155건 생사확인 1,014건 서신교환 4,047건	상봉 1,152건 생사확인 2,833건 서신교환 3,096건

0 북한의 변화면에서

-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북한의 대외 개방과 의존도가 제고되었으며,
 - * 식량 20% 이상, 석유 50% 이상을 무상원조에 의존
- 주민들의 대남 적대감도 현저히 약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정상회담 이후 대남적화전력이 변화되고 있는 징후도 있음.

- 내부적으로 경제건설을 최우선의 과제로 제시하면서, 과거의 사고와 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사고와 방식을 가지라고 촉구하는 등 변화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변화징후를 보이고 있음.

* 김정일 위원장은 1.4 노동신문 어록 발표를 통해 “과거의 낡고 뒤떨어진 것을 과감히 버릴 것”을 촉구

0 남북관계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임.

- 미·북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가 추진되었으며, 대량살상 무기를 대화에 의해 해결하는 방향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미·일·중·러 등 주변국가와 EU 국가들이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점도 중요한 변화임.

* 2000.1 이후 북한은 서방 17개국과 수교, 주요 미수교국은 미·일·불로 줄어듦.

0 일부에서 대북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주장하는 근거는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 변화, △대남 적화전략의 공개적·공식적 포기, △대남 군사위협을 현저한 감축 등에서 큰 성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나,

- 이러한 것은 장기적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이지, 당장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
- 그러나 현재와 같은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초당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가면 그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함.
- 지금 상황에서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중단한다면 그러한 목표달성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임.
- 따라서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은 평가의 잣대가 잘못된 것이며, 사실의 왜곡임.

6. 대북 접근 자세

- 북한은 체제붕괴 불안의식과 열등의식, 그리고 폐쇄성속에서 형성된 잘못된 자존심과 경직성을 갖고 있음.
 -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지도층과 주민을 상대로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보다 많은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 닫힌 북한사회를 열고, 변화를 유도하고, 대남위협을 해소하고자 함.

- 이러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과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며,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는 대북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는 슬기가 필요함.

- 그러나 일부에서 이러한 戰術的 柔軟性을 대북 저자세다, 북한에 끌려다닌다, 퍼준다 등으로 비판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이루어진 성과, 즉 정상회담, 이산가족문제 해결,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경협 합의서 등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기했고 북한이 따라 온 것임. (정상회담 이후 합의된 31개 사업중 25개 사업이 우리측 제의)
 - 회담의 장소나 일정 등 비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저자세, 끌려다닌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것임.
 - 남북관계에서 그러한 사소한 문제가 전부이고 본질문제인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남북간의 우열승패가 분명하고 우리의 주도에 의해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임.
 - 저자세와, 끌려다닌다 하는 비판은 북한을 과대평가했던 과거에나 나올 수 있는 주장임.

0 퍼준다는 것도 남북관계 현실을 도외시한 감정적 비판임.

- 한반도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입장에서,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전통임.
-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을 돕고 있는데 동족인 우리가 인색하게 모른 채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도덕성과 한반도 관리능력을 불신하게 될 것임.

* LA Korea Town 흑인폭동은 인색한 韓人에 대한 반발

- 우리가 돕고 있는 사실은 북한 동포들이 이미 알고 있으며, 이는 대남적대감을 악화시키고 대남의존도를 높이고 있음.
- 또한 대북지원은 前 정부때인 '95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현재의 지원규모가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며, 서독의 동독지원에 비해 보면 약소함.
-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1인당 연평균 2천원씩 지원하는 것을 퍼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또한 우리의 대북지원은 연 1억달러 수준인데, 그것은 서독의 동독에 대한 지원(연 32억 달러)의 1/32 수준에 불과함.
- 퍼준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임.

※ 참고 : 대북지원 현황

〈참고〉

대북지원 현황

□ 국민의 정부('98.3 ~ '01.7) 대북지원

총 지원액 (3년반)		연평균 지원액	
총 액	국민 1인당	총 액	국민 1인당
₩3,444억 (\$280백만)	₩7,280 (\$6)	₩984억 (\$80백만)	₩2,080 (\$1.7)

1) 직접지원 ₩2,345억, 차관지원 ₩1,055억, 간접(민간)지원 ₩44억
: 계 ₩3,444억

2) 인구 : 평균 4,730만명 기준

3) 문민정부 지원규모('95.6 ~ '98.2) : 총 2,114억원, 연평균 국민 1인당 ₩1,856 (인구 4,550만명 기준)

□ 한국의 대북지원, 서독과의 비교

구분	서독의 대동독 지원 (18년간)		한국의 대북지원 (6년간)			
	총액 ('73 ~ '90)	연평균	문민정부 ('95.6 ~ '98.2)	국민정부 ('98.3 ~ '01.7)	계 ('95.6 ~ '01.7)	연평균
계	\$574억 (1,044억DM)	\$32억	\$2.8억 (₩2,311억)	\$3.9억 (₩4,878억)	\$6.7억 (₩7,189억)	\$1.1억
정부 차원	\$163억 (296억DM)	\$9억	\$2.6억 (₩2,114억)	\$2.8억 (₩3,444억)	\$5.4억 (₩5,558억)	\$.9억
민간 차원	\$411억 (748억DM)	\$23억	\$.2억 (₩197억)	\$1.1억 (₩1,434억)	\$1.3억 (₩1,631억)	\$.2억

※ 서독대비 연평균 총액규모 1/32, 정부지원 1/10

7.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노력

- 대북정책은 국민적 역량을 모아 북한을 상대해야 하므로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
 - 국민적 합의는 대북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는데도 매우 중요함.

-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일부 이견이 강하게 분출되어 국론이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는 원인은 轉換期的 狀況에서 비롯됨.
 - 남북관계는 적대관계와 화해협력관계가 병존하는 모순된 현실이며, 따라서 안보불안이 남아 있고 국민 내부에서 냉전의식과 탈냉전의식이 혼재해 있으며
 - 대북정책은 이러한 이념적 견해차이가 가장 첨예하게 나타날 수 있는 대상임.
 - 과거 공산주의 팽창시기에 북한의 적화통일공세를 막아내기 위한 총력안보태세에서 형성된 피해의식과 수세적 대응에 익숙한 측면이 남아 있으며
 - 공산체제 붕괴라는 객관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공산화에 대한 공포감은 아직도 남아 있음.
 - 화해협력과 평화만들기를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새로운 상황으로서 흔쾌히 동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 북한의 변화를 보는 잣대가 서로 달라서 북한의 장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점 등에 기인함.

0 따라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함.

- 안보태세를 튼튼히 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불가능하고, 도발시에는 가장 신속히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 한편, 탈냉전 국제질서하에서 남북이 대결하는 것은 민족 자해행위이며
- 공산주의 실패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이 증명된 역사적 흐름과 남북간 국력격차의 심화를 감안해 볼 때 남북 관계는 우리가 주도해야 함.
- 이러한 현실에 맞게 우리는 피해의식·수세적 자세에서 벗어나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에 접근하고 다룰 때가 됨.
- 이렇게 하는 것이 전쟁방지·평화정착·남북관계개선·북한의 변화 등 역대정부가 확고한 국민적 합의하에 일관되게 추진했던 대북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며
- 이를 위해서는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지원하는 활동이 필연적으로 요구됨.
- 이러한 대북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에는 비용이 들어가야 하나, 이는 안보위협을 해소하고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투자임.

— < 남북간 국력 비교 > —

- o 국민총생산 27배 (남 : \$ 4,552억, 북 : \$ 168억)
 - o 무역규모 169배 (남 : \$ 3,327.5억, 북 : \$ 19.7억)
- ※ 2000년 기준

0 이러한 객관적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

- 대북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 일희일비할 필요없이 부작용을 통제하면서
- 자신감과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신축성을 발휘해나가야 한다는 점임.

* 어둠은 어둠으로 물리칠 수 없고 빛으로만 물리칠 수 있으며, 불신은 불신으로 해소할 수 없으며 화해협력으로 해소할 있음.

0 또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극단론을 견제하고 초당적 협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통일세력·반통일세력, 보수·진보의 양분론도 국민적 합의를 위해 자제할 필요

〈끝〉